

www.kef.or.kr

2025 e경제 · 경영정책 리포트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Weekly Newsletter



< contents >

- ▶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동참 안내
-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시 美 관세부와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동참 안내

-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5개 단체*와 정부는 지난 3월 13일 민·관 합동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협약을 체결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 동 캠페인은 4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민·관이 함께 외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적극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민간 협·단체는 소상공인 점포들이 국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포함.

- 이에 우리 협회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에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업 여건에 맞는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적극 동참해 주길 요청

※ 내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예시

- ▶ **(선구매·선결제)** 생산활동 등 경영에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 선결제를 통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 영세·소상공인을 지원
- ▶ **(연차휴가 적극 활용 권장)**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 노력, 지역 축제·이벤트를 사내에 적극 홍보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활용이 국내 여행 활성화와 지역 소비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상품권 지급 등 노력)** 협력기업이나 사내 직원들에게 선물 제공 시 우리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을 우선 고려
- ▶ **(기타)** 이외에도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노력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시 美 관세부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납품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비용부담을 이유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부당감액행위,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위반 시 제재) 시정권고·명령(벌점 1.5~2점)
 -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부당감액행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smes.go.kr/poll/)에 신고 가능

문의 : 경제분석팀(02-3270-7376)

< contents >

- ▶ 통계청,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3.31)
-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3월 수출입동향」 발표 (4.1)
- ▶ 통계청, 「2025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4.2)

◆ 통계청,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3.31)

- **(생산)** 2025년 2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0.5%), 광공업(1.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6% 증가(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 전산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 전월대비) : 0.5(*24.10)→ 1.2(11)→ 1.8(12)→ 3.0(*25.1)→ 0.6(2)
 -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전자부품(9.1%), 전기장비(6.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0% 증가(전년동월대비 7.0%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3.9%)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도소매(6.5%), 금융·보험(2.3%)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전년동월대비 0.8% 증가)
- **(제조업 평균가동률)** 2025년 2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1%로 전월대비 0.4%p 하락
 - ※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 73.1(*24.10)→ 71.1(11)→ 73.2(12)→ 73.5(*25.1)→ 73.1(2)
- **(제조업 재고율*)** 2025년 2월 제조업 재고율은 107.8%로 전월대비 2.8%p 하락(전년 동월대비 2.9%p 하락)
 -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 제조업 재고율 추이(%) : 111.0(*24.10)→ 113.6(11)→ 103.5(12)→ 110.6(*25.1)→ 107.8(2)
- **(소매판매)** 2025년 2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

(△1.7%)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3.2%)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전년동월대비 2.3% 감소*)

* '24.3월(1.5%)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 기록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 , 전월대비) : △0.7('24.10)→ △0.7(11)→ 0.5(12)→ △0.7('25.1)→ 1.5(2)

**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23년 12월(△0.6%)부터 2024년 12월(△2.5%)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1월에는 보합 수준에 그친 후 2월에는 다시 감소.

○ **(설비투자)** 2025년 2월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23.3%)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7.4%)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18.7% 증가*(전년동월대비 7.7% 증가)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추이(% , 전월대비) : △3.4('24.10)→ △1.7(11)→ 7.2(12)→ △15.7('25.1)→ 18.7(2)

* 2003년 2월(19.4%)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 기록

○ **(건설투자)** 2025년 2월 건설투자는 건축(△2.2%)에서 공사실적이 줄었으나, 토목(13.1%)에서 공사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1.5% 증가*(전년동월대비 21.0% 감소)

* 건설투자는 전월대비 기준으로 '24.8월(△2.1%) 이후 '25.1월(△4.6%)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25.2월(1.5%)에는 증가 전환

▶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 전월대비) : △0.5('24.10)→ △3.1(11)→ △1.8(12)→ △4.6('25.1)→ 1.5(2)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전월대비 0.1p 상승),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전월대비 0.1p 상승)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3월 수출입동향」 발표 (4.1)

○ **(총괄)** 2025년 3월 수출은 582.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했으며, 수입은 533.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수출 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 1.3('24.11)→ 6.6(12)→ △10.1('25.1)→ 0.7(2)→ 3.1(3)

- 2025년 3월 무역수지는 49.9억 달러 흑자*를 기록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55.7('24.11)→ 64.9(12)→ △18.0('25.1)→ 41.5(2)→ 49.9(3)

○ **(품목별)** 15대 주력 품목(전체 수출의 약 78%를 차지) 중 석유제품(△28.1%), 석유화학(△10.8%), 철강(△10.6%) 등 8개 품목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선박(51.6%), 컴퓨터(33.1%), 반도체(11.9%), 자동차(1.2%) 등 7개 품목의 수출은 증가

※ 2025년 3월 15개 품목별 수출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선박) 51.6, (컴퓨터) 33.1, (무선통신기기) 13.8, (반도체) 11.9, (바이오헬스) 6.9, (디스플레이) 2.9, (자동차) 1.2, (일반기계) △3.5, (자동차부품) △3.6, (이차전지) △4.7, (섬유) △6.0, (가전) △7.3, (철강) △10.6, (석유화학) △10.8, (석유제품) △28.1

○ **(국가별)** 9대 주요 수출 시장인 對인도(△0.4%), 對중국(△4.1%), 對중남미(△16.9%) 수출은 감소했

으나, 對일본(2.2%), 對미국(2.3%), 對아세안(9.1%), 對EU(9.8%), 對중동(13.6%), 對CIS(30.1%) 수출은 증가

◆ 통계청, 「2025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4.2)

○ 2025년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1.5('24.11)→ 1.9(12)→ 2.2('25.1)→ 2.0(2)→ 2.1(3)

- **(지출목적별)** 기타 상품 및 서비스(4.2%), 음식 및 숙박(3.0%), 교육(2.9%),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4%) 등 12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전가·가스·수도(3.1%) 등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3.1%)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2025년 3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문의 : 노사협력팀(02-3270-7417)

< contents >

-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
-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앞두고 노동계의 투쟁 증가
- ▶ 야당은 국회 차원의 정년연장 논의 진행
- ▶ 전자·IT업계와 철강·조선업계의 임단협은 상반된 양상으로 전개
- ▶ 임금교섭 타결현황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

- 고용부가 3. 31 최저임금위원회에 2026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예정
 - ※ 최저임금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 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 최저임금위원회는 4. 22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잠정)이며, 노동계는 이날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에 적용할 근로자 단일안 마련 계획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커서 순탄치 못할 것으로 전망
 - 국내외 주요기관이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노동계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2,600원 제시
 - ※ 또한, 임단협 요구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7.3% 인상, 민주노총은 6.2% 인상을 제시

- 한편, 노동계는 고용부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교체를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준비 활동 진행

※ 한국노총은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기사돌봄서비스 지부장에서 유영미 한국노총 성남상담소 소장으로, 민주노총은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에서 도명화 전국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각각 교체 신청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앞두고 노동계의 투쟁 증가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 4)을 앞두고 노동계의 정치투쟁 증가
 - 양 노총은 4. 1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광화문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24시간 철야 농성'(4. 1~2) 진행
- 민주노총은 4. 1 산하조직에 긴급지침을 시달한 데 이어 4. 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4. 4까지 철야농성, 집회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
 -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의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집회 참석, 수도권 철야농성(4. 3~4), 확대 간부 결의대회(4. 3), 현재 앞 파면 촉구 집회(4. 4) 진행 예정
 - 민주노총은 대통령 탄핵 기각시 탄핵 기각 규탄 집회(4. 4~5), 「중앙집행위원회」 개최를 통한 투쟁방침 결정(4. 5), 총파업 돌입(4. 7) 예고
- 한편, 노동계는 대통령 탄핵심판(4.4) 결과에 따라 투쟁계획 및 정치방침 논의 예정
 - 노동계는 탄핵이 각하·기각될 경우에는 임단협 본격 개시 전인 근로자의 날(5. 1)까지 정치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 정책 요구안을 마련하고,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 연대 등을 통해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

◆ 야당은 국회 차원의 정년연장 논의 진행

- 경사노위가 4월 내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 검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 2 정년연장 TF 발족

※ 정년연장TF 위원은 소병훈 의원, 김주영 의원, 이정문 의원,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 본부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17명으로 구성

- 정년연장TF는 ① 4~7월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 ② 7월~8월 정년연장 입법 방안 마련, ③ 9월~11월 정년연장 입법안 발표 및 입법 추진 계획

○ 한편, 여당은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 25 「원내대책회의」에서 단계적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논의가 경사노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전자·IT업계와 철강·조선업계의 임단협은 상반된 양상으로 전개

○ LG전자가 올해 임단협을 조기에 타결(3. 12)한 가운데 일부 전자사, IT사도 2025년 임단협 교섭 마무리

- 삼성전기 노사는 3. 31 임금교섭 마무리

※ 삼성전기 노조는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3. 27~31) 결과 79% 찬성으로 가결됨.

· 주요 합의안에는 ▲임금 5.0% 인상(기본급 3%+성과 인상률 2%), ▲특별 조 직활성화비 30만원 지급 등 포함

-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도 ▲임금 5.1% 인상(기본급 3%+성과 인상률 2.1% 인상), ▲복지포인트 150만원 지급 등에 합의(3. 27)

※ 삼성디스플레이노조는 4. 3부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 또한, 네이버 노사도 ▲임금 5.2% 인상, ▲설·추석 명절 수당 80만원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 등에 합의(4. 2)

○ 반면, 일부 철강사, 조선사는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노사갈등 지속

-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4. 3 기자회견을 통해 4. 8 파업 예고

※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 ▲현대자동차 수준의 성과급 지급(기본급의 500%+1,800만원 지급)을 요구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지회장은 3. 14부터 장교동 한화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 지속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상여금 300% 지급, ▲원청(한화오션)과의 교섭 등 요구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 2 2022년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 사태로 발생한 소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기구 출범 관련 협의 진행

- 한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4. 8,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4. 15 상견례를 앞두고 있어 4월 중순부터는 임단협 교섭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안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임단협 교섭 및 투쟁 상황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 임금교섭 타결현황

고용노동부 발표, 임금결정현황조사 결과	
▶	협약임금 인상률*은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체 6,782개를 대상으로 집계, 2024년도 임금결정현황 제출 사업체는 6,672개(98.4%) * 노사 협약으로 정한 사전적 임금(정액급여, 고정상여금 기준) 인상률
▶	2024년 연간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	(전체) 3.6%, 전년동기 4.2% 대비 0.6%p 하락
-	(규모별) 100~299인 3.8% (전년 4.6%), 300인 이상 3.6% (전년 4.1%) * 1,000인 이상 3.6% (전년 4.1%)

< 개별기업 임금교섭 타결현황 >

(2025. 4. 2 현재)

번호	업 체 명	업종	일시	상급단체	내 용
15	삼성전기	제조	4.1	-	▶ ('25년) 임단협 타결 · 임금 평균 5.0% 인상(기본 인상을 3.0%, 성과 인상을 2.0%) · 특별 조직활성화비 30만원 지급 등
14	LG전자	제조	3.12	한국노총	▶ ('25년) 임단협 타결 · 임금 평균 4.3% 인상 · 직급별 초임 100만원 인상 · 사무직 고정OT(초과근무) 축소(24시간→20시간)* 등 * 줄어든 고정OT수당은 기본급에 산입
13	삼성전자	제조	3.5	한국노총	▶ ('25년) 임단협 타결 · 임금 5.1% 인상(Base-up 3.0%, 평균 성과인상률 2.1%) · 자사주 30주 지급 ·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 지급 · 고정시간외수당 축소(16.5시간→14시간) 등

12	SK이노베이션	제조	2.24	한국노총	▶ ('25년) 임협 타결 · 임금 2.3% 인상 등
11	KB국민은행	서비스	1.20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임금 2.8% 인상 · 성과급 250%(월 기준임금 기준)+200만원 지급 등
10	HD현대오일뱅크	제조	1.15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3.6% 인상 · 위기 극복 격려금 350만원 지급 · 임단협 타결 격려금 기본급의 100% 지급 등
9	하나은행	서비스	1.13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임금 2.8% 인상(일반직 기준) · 특별성과급 기본급의 280% 지급 ·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
8	포스코	제조	12.27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Base-up) 10만원 인상 · 경영목표 달성 동창 격려금 30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포함) 지급 ·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 지급 등
7	신한은행	서비스	12.27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임금 2.8%~3.5%* 인상 * 직군별 임금인상률로 일반직 2.8%, FS직 3.0%, 사무직군 3.5% · 경영성과급 기본급의 280%(현금 230%+주식 50%) 지급 등
6	HD현대미포	제조	12.2	-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3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격려금 470만원 지급 등
5	HD현대중공업	제조	11.27	민주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3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격려금 470만원(상품권 50만원 포함) 지급 · 설·추석 귀향비 인상(각 50만원→70만원) 등
4	SK하이닉스	제조	10.29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전임직(생산직) 노조] · 임금 5.7% 인상 · 격려금 450만원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일(3회 분할) 지원 · 장기 근속 휴가 확대(7일→10일) 등
3	한화오션	제조	10.13	민주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1만 7,404원 인상 · 타결 일시금 및 상생격려금 370만원 지급 등
2	르노코리아	제조	10.11	-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8만원 인상 · 신차 출시 격려금 300만원 지급 · 변동 PI 최대 100%(약 200만원) 지급 · 스페셜 인센티브 250만원 지급 등
1	기아	제조	10.10	민주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1만 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 경영성과급(기본급의 300%+1,000만원) 지급 ·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기본급의 100%+280만원) 지급 · 특별성과격려금(기본급의 100%+500만원) 지급 ·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

문의 : 근로기준정책팀(02-3270-7390), 의정협력팀(02-3270-7382)

< contents >

○ 법안동향

- ▶ [22093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3.27)
- ▶ [220939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3.27)
- ▶ [22093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국), 3.27)
- ▶ [22094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3.28)
- ▶ [22094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민), 3.28)
- ▶ [22094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민), 3.28)
- ▶ [22094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국), 3.28)
- ▶ [22094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민), 3.31)
- ▶ [2209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4.1)

○ 국회동향

- ▶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4.1)
- ▶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출범식(4.2)

○ 판례동향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선거가 적법·유효한지 여부(적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3가합96060 판결

○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안내

○ 법안동향

◆ [22093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3.27)

- (발의 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포함

◆ [220939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3.27)

- (발의 이유) 현행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은 보험료 징수 근거를 위해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상 국세청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의무와 중복된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사업주가 ‘소득세법’ 등에 따라 보수총액을 관할 세무서장 등에 신고한 경우,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

◆ [22093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국), 3.27)

- (발의 이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피해를 주는 행위’로 확대
②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신고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
③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현 ‘사용자’ → ‘사용자 및 근로자’로 확대하고, 금액도 현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로 확대

◆ [22094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3.28)

- (발의 이유) 가사사용인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 [22094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민), 3.28)

- (발의 이유)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①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되, 사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는 제외
 - 1) 노무제공자가 계약상이나 실제로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 2)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3)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해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참여·종사하는 경우
- 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시, ‘계약 당사자 여부 등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

◆ [22094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민), 3.28)

- (발의 이유)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근로자가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 ‘2인 1조’로 작업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 부여
 - ① 승강기, 크레인 등 근로자 및 시설물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 ② 수중, 지하 및 갯도 등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

◆ [22094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국), 3.28)

- (발의 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 제기
- (주요 내용) ①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
- ② 상속세 최고세율을 現 ‘50%’ → ‘40%’로 하향 조정

◆ [22094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민), 3.31)

- (발의 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

◆ [2209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4.1)

- (발의 이유) 현행법(근로기준법 제57조)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갈음해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상휴가의 소멸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퇴직 시 정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대해 서면 합의 시 보상휴가의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국회동향

◆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4.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 이후 국회에서 재의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한법 제53조)

◆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출범식(4.2)

- 더불어민주당은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올해 9월까지 노·사 의견을 반영한 정년 연장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발표
※ TF는 소병훈(위원장)·김주영(간사)·이정문·강준현·권형엽·김남희·김영환·윤건영 의원 및 노사단체 대표 등 총 17명으로 구성
(경제계 위원)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등
(노동계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 판례동향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선거가 적법·유효한지 여부(적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3가합96060 판결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명확한 내부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 사용자의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 선거 절차 및 투표 결과 역시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없으며, ▲ 팀장급 직원이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위원 자격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적법·유효하다.

사실관계

- A사는 프랑스 주류 제조사인 E의 한국 법인으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류무역, 판매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 C, D(이하 'B 등')는 A사 소속 근로자들이자 F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임.
- A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4. 1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해왔음.
- 2019. 4. 1. 희망퇴직 시행으로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고, 조합원 수 감소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A사가 근로자위원 선거 절차를 진행했고 근로자위원이 선출됨.
- A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A사는 변호사 및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으로 노사협의회 정상화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정함.
- 준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 7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를 전 직원에게 공지하였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서별로 근로자위원 7명의 선출 방식을 공고하고, 2023. 3. 22.부터 3. 23.까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여, 전체 근로자 147명 중 8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율은 59.9%였으며 7명의 근로자위원이 선출됨.
- 이에 대해, B 등은 ▲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상 하자, ▲ 선거 절차 및 투표 결과의 하자, ▲ 근로자위원 자격의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함.

<p style="text-align: center;">판결요지</p>	<p>■ 관련 법리</p>
	<p style="text-align: center;">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인바,
	<p style="text-align: center;">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선거절차에 관련된 자치규약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사업 경영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p>■ 판결 요지</p> <p>○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상 하자 존재 여부 (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근로자위원 보궐 위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필요하였음. - A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계획과 일정을 공지하고, 변호사 및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중 일부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함. - 또한,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준비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B 등은 기존 근로자위원이 후임자 선출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후임 위원 선출은 근로자위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도 이를 근거로 볼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 A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선거 계획과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에**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사가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였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음.**

○ 선거 절차 및 투표 결과의 하자 존재 여부 (부정)

- 이 사건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A사 인사팀의 직인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B 등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A사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음.

①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자율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장에 들어가는 근로자들이 **촬영됨으로써 자신의 투표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선거는 **7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7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전원이 선출되는 선거로서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③ A사는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과반수 근로자의 투표 참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표소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를 독려하였을 뿐,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 근로자위원 자격의 하자 존재 여부 (부정)

- A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와 각 부문별 전무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팀장급 직원들이 대표이사 또는 전무로부터 포괄적인 경영 권한을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대리하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판결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 선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가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절차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음. - 회사는 변호사 및 노무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을 통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입을 최소화한 방식을 취함. - ‘준비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은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활용되었음.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유의하였음. - 아울러, 선거 참여 유도를 위해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정만으로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표 진행을 위한 실무적 지원 행위가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팀장 직급이라고 해서 곧바로 ‘사업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구조 및 권한 분장에 따라 팀장 직급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부재 및 선거규정 미비 등 제도적 공백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절차 이행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실무적 준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

○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안내

○ 다음과 같이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제 :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 일시 : 2025. 4. 9. (수) 오후 14:30~16:3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 발제 및 토론
 - (1) 좌 장 : 김영문 명예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 발제자 : 성대규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3) 토론자 : 이준희 교수(광운대학교 법학부)
 김봉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이광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첨부 :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개요, 1부

< 첨부 1 >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개요

1. 주제 :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2. 일시 : 4월 9일(수) 14:30 ~ 16:30
3.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네셔널 프레스클럽(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 발제 및 토론
 - 좌 장 : 김영문 명예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자 : 성대규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이준희 교수(광운대학교 법학부)
김봉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이광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5. 행사 일정(안)

시간	행사 내용	
14:20~14:35	등록 및 접수	
14:35~14:40	기념 촬영	
14:40~14:45	개회사	• 이동근 상근부회장
14:45~15:15 (30분)	발제	• 발제 : 성대규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문제점
15:15~15:20	장내 정리	
15:20~16:10 (50분)	토론	• 좌 장 : 김영문 명예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1: 이준희 교수(광운대 법학부) • 토론 2: 김봉수 교수(대구가톨릭대 법학과) • 토론 3: 이광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16:10~16:30	답변	• 청중 질의 및 발제·토론자 답변
16:30	폐 회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 릴레이 설명회 개최

일시: 4. 8.(화) ~ 4. 18.(금)

- 장소**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
- 내용** 지원 사업 추진 방향, 개편사항, 우수사례 소개, 컨설팅 절차 등 안내
- 대상** 사업장 대표, 인사노무 담당자 외 관련 업무 담당
- 신청** 일터혁신 상생플랫폼(<https://www.kwpi.or.kr>)



분야	일시	장소	문의
대구청	4.8(화) 14:00~15: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방관서) 053-556-6267 (노사발전재단) 02-6021-1027
부산청	4.10(목) 14:00~15: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방관서) 051-850-6449 (노사발전재단) 02-6021-1175
대전청	4.11(금) 15:00~16: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방관서) 042-480-6255 (노사발전재단) 02-6021-1026
서울청	4.15(화) 14:00~1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방관서) 02-2250-5454 (노사발전재단) 02-6021-1214
광주청	4.17(목) 14:00~15: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방관서) 062-975-6307 (노사발전재단) 02-6021-1167
충부청	4.18(금) 14:00~15:30	충부지방고용노동청	(지방관서) 032-460-4561 (노사발전재단) 02-6021-1229